

문 1.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.
- ㄴ.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.
- ㄷ. 2003년에 「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였다.
- ㄹ.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은 없지만 법인격을 갖는다.
- ㅁ.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.

- ① ㄱ, ㄷ, ㄹ, ㅁ
- ② ㄴ, ㄹ, ㅁ
- ③ ㄱ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2.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·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,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문 3.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?

- ① 서울특별시 규칙 개정
- ②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
- ③ 대통령령 개정
- ④ 「지방자치법」 개정

정답 및 해설

- 1. ④
 -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음.
 - 2003년 노무현 정부시기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, 2008년 이명박 정부시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.
 -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과 법인격도 없음.
- 2. ①
 -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항: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·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함.
- 3. ③
 -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단서: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
 - ※ 2021년 현재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보다는 제정이 정확한 표현임.

문 4. 「지방자치법」상 서울특별시의 19세 이상 주민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서울특별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- ㄴ. 서울특별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.
- ㄷ.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ㄹ. 서울특별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ㄴ, ㄷ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5.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7%, 특별조정교부금은 3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해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함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.
- ④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인 점에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.

정답 및 해설

- 4. ④
 -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환(동법 제20조), 감사청구(동법 제16조), 조례 제정(동법 제22조)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.
- 5. ①
 - 지방재정법 제29조의3: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.
 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: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특별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.
 - 지방재정법 제29조의2: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함.
 -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용도가 제한됨.

문 6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.

문 7.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본의 도쿄도는 시·정·촌과 특별구를 두고 있다.
- ②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(metropolitan district)를 통합시(unitary authority)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
- ③ 프랑스의 자치계층은 레지옹(region), 데파르트망(département), 코뮌(commune)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④ 독일의 경우 베를린 등 3개 도시주(city-state)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단층제와 중층제가 혼용되고 있다.

문 8.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했다.
- ② 주민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고 있다.
- ③ 위법한 재무행위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일반 사무행위도 포함한다.
-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정답 및 해설

6. ①
·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: 행정협의회는 보고사항
· 시·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음.
·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4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, 미이행시 직무이행명령이나 대집행 등이 가능함.
7. ②
·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를 통합시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.
8. ③
· 지방자치법 제17조: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재무행위분야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문 9. 「지방자치법」상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관하여 조연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- ②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·조정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.
- ④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1차로 환경부장관의, 2차로 서울특별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문 10.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반드시 주민 직선으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.

문 11.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광역시도가 출자·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.
- ④ 출자·출연기관의 설립목적, 주요사업,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④
·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: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음.
10. ①
· 대한민국헌법
- 제117조 제2항: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.
- 제118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
- 제118조 제2항: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.
11. ②
·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함.

문 12. <보기>는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. 가~다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?

- 사용료,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(가)(으)로 정한다.
-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(나)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(다)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	가	나	다
①	조례	행정안전부령	100분의 50
②	지방재정법	대통령령	100분의 10
③	조례	대통령령	100분의 50
④	조례	행정안전부령	100분의 10

문 13.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정되었다.
- ②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.
- ③ 1956년 서울특별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선출되었다.
- ④ 제4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였다.

문 14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?

- ① 공익상 필요한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④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

문 15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.
-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문 16. 티부 가설(Tiebout hypothesis)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.
- ②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자립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.
- ③ 지방공공재 공급의 분권화가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.
- ④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.

문 17.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.
- ②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.
- ④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
정답 및 해설

12. ③
·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
13. ③
· 1956년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장 및 도시사는 대통령이 임명
· 1960년 제3차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 및 도시사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
14. ②
·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음.

정답 및 해설

15. ③
· 지방자치법 제91조 1제항: 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함.
16. ①
· 티부이론 지방공공재의 '최적 공급규모 결정'에 대한 것이 아니라, 지방공공재는 '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'이 이루어진다고 봄.
17. ④
·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: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함.

문 18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문 19.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.
-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은 주민투표, 주민소환,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.

문 20.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8. ③

· 조례 및 규칙은 '지방자치단체'의 권한에 해당

19. ③

· 주민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.

20. ④

·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2항: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.